

(첨부 1) 청년 녹색당 운영위원 현장등록에 관한 건

내용 :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후보 현장등록에 대해 총회 의결을 요청합니다.

설명 : 청년녹색당 규약에 의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 사무처 상근자가 장을 맡고 직권으로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청년녹색당 내부 선거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 선관위는 녹색당 선거관리당규와 청년녹색당의 관례에 따라 선거를 운영하기를 기대받았습니다.

처음 후보 등록 공지는 2월 2일까지 등록이 가능했으나, 선거운동 등이 규정되지 않음에 따라 수정되어 1월 25일로 당겨졌습니다. 이 날짜는 총회 공고가 메일로 이뤄진 20일로부터 약 4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었고, 5명밖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모두 당선된다 해도 8명의 최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전후보등록 공고가 나왔을 때에는 연장이나 현장등록이 없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선관위에서도 명확히 결론을 내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25일 일요일까지 등록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아 연장 결정을 생각해 보겠다고 며칠 전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저희는 등록 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계속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끝난 이후에도 운영위원 전원의 의견 일치로 항의를 하는 것을 계속 전달하였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이전의 관례에 따라 연장 및 총회 당일도 추천이 가능할 거라 순진하게 생각한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후보 등록이 들어오는 대로 연장을 고려해보겠다"는 방침은 몇몇 운영위원 중 중임을 고려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아직 고민중인 사람들의 출마 가능성을 넓힐 수 있도록 선관위가 후보 등록을 연장하게 만들기 위하여 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결과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섯 명이 여덟 명의 운영위원 정원에 비해 반수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매우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총회 당일날까지도 가능성을 열고, 가부를 토론을 통한 가능성 파악과 총회 참석자들의 결정에 맡겨왔던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입니다.

또한 청년녹색당 규약에서 자천과 타천 모두를 명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이번 후보 등록 방식에서는 타천을 허용하지 않은 셈이 되었습니다. 청년녹색당의 상황을 보면 타인의 추천으로 나올만한 능력 있는 후보들이 꽤 있으며, 지난 총회에서도 그런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습니다.

사전 후보등록 절차는 청년당원들에게 후보자에 대해 알 권리를 주기 위함이지만 규약에 확정되어있지 않아 선관위와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규의 선거관리세칙은 후보등록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안을 포괄하여 최선의 선거를 만들어내야 할 선관위의 재량은 선거를 제약하기 위함이 아닌 그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 등록이 늦어져 선거운동을 오래 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은 청년녹색당이 아닌 후보 당사자이며, 만일 총회 당일 등록을 완전히 막는다면 총회 당일 선거의 운영에도, 5명밖에 등록하지 못한 예비 운영위원 후보들에게도 올 한 해의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총회에서 이뤄질 운영위원 선거에서 당일 후보 추천을 받아 더 많은 운영위원 후보들을 기반으로 선거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이것을 총회 안건으로 부치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은 하지 못했지만 이전에 망설였거나 늦게 결심한, 오늘 등록하여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실 분들에게서는 찬성을, 공고된 선거 일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만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반대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 올림.